

월요광장

사람은 언제 바뀔까?



문요한  
정신과 의사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다. 학창 시절의 추억에 이어 가족들 이야기로 넘어갔고 이내 새 정부 출범에 대한 주제로 대화는 계속 이어졌다. 그때 오랜만에 모임에 나온 친구 녀석이 “와~! 우리 나이가 벌써 쉰이 넘는 거야!”라고 소리쳤다. 건너편의 또 다른 친구가 “왜 그래, 쉰 넘은지가 언제인데... 네 나이가 몰라?”라면서 면박을 주었다. 그는 정말 자신의 나이를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

나이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화제는 또 다시 건강 문제로 넘어갔다. 그 사이에 협심증 진단을 받은 친구도 있고, 큰 수술을 받은 친구도 있었다. 쉰이 넘어가니 다들 기본으로 한두 개의 병명은 달고 있었다. 또 다른 친구 녀석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

했다. “아, 앞으로 우리가 다 같이 건강하게 만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될까?” 다들 무슨 소리냐고 했지만 무언가 느낌이 있었던 모양이다. 다들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았다. “더 나이 들기 전에 자주 보자!” 그냥 하는 말들이 아니었다. 헤어질 때 맞잡은 손들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심리학의 연구 분야는 넓다. 그 중에는 ‘타임 패러독스’의 저자인 존 보이드처럼 시간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는 왜 시간을 연구하게 되었을까? 그가 한번은 바쁜 시간을 쪼개어 로마 여행을 갔을 때다. 여행 중에 그는 인간의 빠른 내부 장식을 한 산타 마리아 델라 콘체지오네 성당을 찾았다. 내부를 관람하다가 유골 더미 밑에 적힌 짧은 문구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었다.

“한때 그들도 당신과 같았으며, 언젠가 당신도 그들처럼 될 것입니다.” 대부분 여행자들에게는 별 감흥을 주지 못한 평범한 문장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에게는 큰 깨달음으로 와 닿았다. 그는 너무나 오랫동안 삶의 윤희성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 삶의 시간이 결국 끝이 나는구나’라는 깊은 자각은 그를 시간심리학자로 만들었다. 아마 당신은 ‘죽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 맞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라는 생각에 늘 ‘나’는 빠져 있기 쉽다. 머리로는 알 뿐 우리는 삶의 윤희성을 늘 외면하고 살아간다.

우리는 흔히 ‘시간은 돈’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도 그럴 것이 시급, 주급, 월급, 연봉 등의 용어처럼 우리가 버는 돈은 시간으로 계산된다. 시간을 팔아 돈을 버는 것으로 느껴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시간을 돈처럼 대하는 것일까? 물론 그 태도가 비슷한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상이한 경우가 많다. 작은 돈까지 철저히 아끼면서 시간은 아무렇지도 않게 허비하거나 돈이 많은 사람은 부러워하면서도 시간이 많은 사람은 한심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왜 시간은 돈이라고 하면서 정작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일까? 만일 시간 또한 돈과 같이 쓸아 둘 수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고팔 수 있는 것이라면 달랐을 것이다. 더 큰 이유는 시간에 대한 엄청난 착각에 있다. 낭비를 해도 될 만큼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늘 충분하다는 착각을 하고, 남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앞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달력에 는 존재하지도 않은 ‘다음에’라는 허위의

시간을 마구 만들어내어 미룰 수 있는 것은 미루고 또 미룬다.

사람은 바뀔까? 바뀐다면 언제 바뀔까? 여러 가지 계기가 있지만 결국 죽음을 인식하고 삶의 윤희성을 자각하게 되면 사람은 변화한다. 시간을 대하는 태도가 보다 진지해지고, 삶에서 덜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것을 구분할 줄 알게 되고 보다 중요한 것에 시간을 쓰게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윤희성의 자각은 여행 중에 경험한 존 보이드와는 달리 대부분 사람들은 질병, 사고, 상실, 이별 등 불행을 통해 겪을 때가 많다. 중요한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초기에는 윤희성의 인식으로 인해 오히려 삶의 허무나 불안이 커질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불행의 경험을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는 불안과 허무 대신 시간을 사랑하고 일상의 순간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된다. 당연한 것이 감사한 것이 되고, 꽃이 피는 모습에 감탄을 하고, 오랜 친구와 만나 밥 한 끼 같이 먹는 것에 행복을 느끼고, 마냥 미워왔던 삶의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펼쳐 보이게 되는 것이다. 삶의 윤희성을 자각한 사람들만이 ‘카페 디엠’을 사는 것이다.

법조칼럼

대한민국은 재심 중



추장훈  
변호사·법무법인 안양

지난봄 개봉된 영화 ‘재심’은 시작부터 큰 화제를 모았다. 배우들의 연기력뿐만 아니라 이야기의 울림 또한 매우 인상적이었던 것이다.

영화는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했다. 이 이야기가 세상에 처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한 방송국의 사건추적 프로그램에 의해서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분노의 글들을 인터넷 여기저기에 쏟아냈다.

이와 함께 재심청구 사건을 맡은 변호사에게는 정의로운 변호사라는 칭송이 이어졌고 각계각층으로부터 후원금도 쇄도했다. 그러한 가운데 법원은 결국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해 법인으로 몰려 10년 간 옥살이를 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는 벌금 50만원 선고) 진범에 대하여는 지난날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영화가 나오기 전 범조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재심’은 낯선 용어였을 것이다. 흔히들 재판은 3심제이고 판결이 확정되면 그것으로 누명을 벗을 길을 잃을 것이라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재심은 국가가 잘못 판단하여 무고한 국민을 억울하게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성격의 재판이어서 기존의 판결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경우에 한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개시된다. 형사소송법은 본래의 판결에서 증거가 된 서류가 위조된 것이거나 수사기관의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을 경우 등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재심재판부는 법인으로 몰린 최씨가 수사기관의 강압 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다.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권력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더욱 조심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과 같은 제도를 둔 까닭은, 억울한 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국가도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다니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5·18과 세월호에 대한 재조사, 4대강 등의 각종 국책사업에 대한 전면적 감사가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의 의지만큼 조사와 감사가 진행된다면 그동안 감춰지고 왜곡됐던 진실들이 하나둘

그 민낯을 드러낼 것이다. 이와 함께 공권력이 얼마나 잘못 행사되었는지도 밝혀질 것이다.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일 것이지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과오는 반복될 것이다. 또한 국민통합이라는 큰 숙제를 이유로 어느 한 쪽의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셔도 안 된다.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제대로 밝히는 것이 오히려 국민을 올바른 방향으로 모을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

누군가의 사적 이익을 위해 참이 되었던 거짓들과 귀찮아서, 혹은 불편해서 한쪽 귀퉁이에 처박아둔 진실들에 대한 ‘재심’이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개시되었다.

재심의 개시는 말 그대로 이제 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일 뿐이다. 그 역사의 판결이 어떠한 것인지 눈 크게 뜨고 지켜볼 일이다.

기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 시대’와 ‘신인본도시’

(Neo-Humanic City)



류재환  
전남대 교수·아시아문화학회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 시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다 돼간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축소되고 왜곡되었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을 이제 바로잡아야 할 시기이다.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세부계획’(2006. 12) 속에 명시되어 있는 ‘신인본도시’(Neo-Humanic City) 구현의 문제는 심히 왜곡되어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도시가 인본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표현의 집합체라고 할 때, 조성사업의 첫 번째 기본 원리인 ‘신인본도시’의 개념은 조성사업의 핵심 개념이다. 이 개념은 ‘아시아’와 ‘교류’ 등의 키워드와 함께 조성사업의 기본가치이자 변별성이요 정체성이기도 하다.

하지만 조성사업은 현재 이 개념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에서 사업의 주체인 문화체육관광

부와 광주시는 ‘신인본도시’에 대해 거의 언급 하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조성사업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그리고 콘텐츠의 문제 등과 같은 모든 난맥상은 바로 ‘신인본도시’ 개념의 후퇴와 일부 관련이 있다.

여기서 ‘신인본도시’는 “인간/신, 인간/자원의 이분법을 전제하는 서구 인본주의와 대별되는 개념으로 인간/신, 인간/자원의 구분이 없는 동양사상 속에서 주체적 인간의 가능성을 도출하고 실현하는 도시”를 말한다. 이 개념에 따르면 광주는 인간의 존재다움을 회복하여 문화의 중심에 서는 ‘주체적 인간’이 넘쳐나는 인간 중심의 도시이다.

‘신인본도시’의 개념에 비추어보자면 문화 인프라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문화 예술에 대한 재정·정책적 지원이 풍부한 것만으로 문화도시의 요건을 갖춘 것은 아니다. 많은 문화시설과 문화예술에 대한 충분한 재정·정책적 지원에 도시와 시민의 ‘인문성’이 더해졌을 때, 시민의 주체적 삶이 가능한 문화도시가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조성사업은 시민기억의 문화적 재현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조성사업은 도시 곳곳에 켜켜이 쌓여 있는 시민의 기억을 시민 스스로 깨어나 문화예술로 담아내고 도시의 정체성으로 만들어내는 시민기억 회복과 재생

의 ‘인문적 사유’의 프로젝트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기억을 스스로 깨내는 의지와 문화에 솔로 담아내고 도시의 정체성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획력 역시 시민문화 커뮤니티 안에서 시민 스스로 양성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이 도시민의 주체적 삶이 가능한 ‘신인본도시’의 개념과도 부합한다. 시민기억을 문화적으로 재현해 내는 주체가 바로 시민이며 그 바탕에는 자발적 참여가 있어야 한다. 시민의 능동적 참여는 시민문화 커뮤니티의 공감을 바탕으로 확장성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5·18민주평화기념관(옛 민주평화교류원) 사대(총단 흔적 복원의 문제) 역시 ‘신인본도시’의 틀 안에서 해결해야만 마땅하다. 핵심은 시민 모두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역사적 맥락을 인권과 평화라는 인문적 사유로 풀어내야지 다른 사유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물리적 복원의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는 ‘탄흔(彈痕)의 문제만이 아니라 ‘탄심(彈心)의 문제, 다시 말해서 그 탄흔이 매개하는 광주의 이야기와 역사의 문제를 함께 다루는 인문적 사유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는 ‘탄흔’과 ‘탄심’을 ‘광각’하는 것은 진실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광각’을 의미하는 라틴어 ‘oblivio’의 반대말은 ‘진실’을 의미하는 ‘veritas’임을 상기해야 한다. 인문적 사유에 토대를 둔 탄흔과 탄심의 복원은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이며 이는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광주의 진실을 지키는 것은 광주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광주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을 인문적 사유를 통해 모색하고 시민 스스로 기억회복과 상처 치유를 이루어내는 것이 ‘신인본도시’의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이제까지 조성사업이 전당과 같은 물적 가치에 집중했다면, 지금부터는 사람과 도시의 질적 가치, 특히 공동체가 가치를 구현하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도시”는 인간의 의미와 가치가 실현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는 도시의 이미지를 보여주기에 급급한 나머지 도시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문화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를 예술적 감성과 융합해내는 ‘가치 지향’의 도시이자 인문적 사유의 토대 위에 시민의 주체적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신인본도시’이어야 한다. 조성사업의 첫 번째인 원리인 ‘신인본도시’의 구현을 위한 많은 일들이 문재인 정부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 시대’에 이루어지길 소망해본다.

社說

내년 국비 확보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야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지자체들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도 지역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내년도 국비에 반영해 달려며 정부 부처에 예산안을 제출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정부에 건의한 내년 국비사업비는 각각 2조2303억 원과 6조3215억 원으로 올해보다 광주시는 380억 원, 전남도는 3010억 원 늘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신규 사업이 광주가 63건에 2476억 원으로 1년 만에 183건에 4331억 원으로 전체 예산 증가 폭을 훨씬 웃돈다는 점이다.

이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호남을 중시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전남 지사 출신인 신임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인준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기획재정부 1차관에 지역 출신 인사가 내정되는 등 실무 라인도 호남에 우호적으로 짜여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역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미래 먹거리가 될 만한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광주가 신규 사업으로 건의한 커넥티드 가전·전장 융합산업 육성과 자동차 전장 기능부품 지원체계 구축은 자동차 산업(ESS) 생태계 구축 사업도 나주 혁신도시 에너지밸리와 함께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사업이다.

광역시·도가 예산안을 정부에 제출함에 따라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예산 조율 작업이 시작된다. 기재부는 8월까지 심사를 마친 뒤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9월에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상임위와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지만 기재부 심사 단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부가 내년 살림살이 규모를 짜는 시점이 만큼 합리적인 논리로 설득을 해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물론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 의욕만 앞선다고 될 일 아니다

“단 1원의 국가 예산이라도 반드시 일자리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의 의지를 보이면서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또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 이행을 위해 국가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일자리위원회는 문 대통령이 취임 당일 제1호 업무지시를 내려 설치한 일자리 정책의 컨트를 타워다. 일자리위원회는 어제 홈페이지 내에 일자리와 관련해 정책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고충을 신고할 수 있는 ‘일자리 신문고’도 설치했다.

이에 앞서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는데 문 대통령의 취임 100일인 8월 17일까지 교육과 노동·복지 등 국정시스템과 재정·세제 등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확대와 4차 산업혁명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통해 민간의 활력을 북돋는다는 방침이다.

일단 이러한 정책 방향은 잘 된 것 같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이 세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투자와 고용에 대한 세제를 지원하는 정책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하지만 비정규직이 많다는 이유로 대기업에 고용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일자리정책은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단순히 비정규직 숫자나 비율로 징벌을 가하면 민간의 자발적인 협조를 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최저임금 수준을 높이는 취지에 공감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의욕만 앞선다고 될 일은 아니다. 수단이 적절하고 효율성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인프라를 깔아 주고 규제를 걷어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無 等 鼓**

조선 시대 신문고(申聞鼓)는 억울함을 왕에게 직접 호소하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왕과 백성의 소통 통로라는 점에서 애민 정신의 발로로 평가받기도 한다. 하지만 신문고 제도의 이면을 보면 율통함을 풀어 주는 제도라기보다는 정권 유지에 위한 고발 기구라는 데 공감하게 된다.

신문고는 태종이 1401년 중국의 등문고(登聞鼓) 제도를 본떠 설치했다. 역처유엔 대궐 안 문루에 설치해 순금사가 관리하다가 나중 에 의금부 당직청으로 옮겼다. 신문고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백성이 의금부 당직청에 걸린 북을 쳐 왕에게 호소하는 제도다. 그러나 억울함이 많은 천민이나 일반 백성이 신문고를 쳤다는 기록은 찾기 어렵다. 양반들의 권리 다툼에 관한 내용만이 전해 올 뿐이다.

이는 천민 등이 사실상 신문고를 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신문고를 치려면 절차가 엄격했다. 먼저 억울한 일이 생기면 한성부에 사는 사람은 한성부의 주무관청에, 지방 사람은 고을 수령에게 알리려 했다. 억울함이 풀리지 않으면 사헌부에 다시 호소해야

했다. 그래도 안 되면 비로소 신문고를 칠 수 있었다.

특히 신문고를 칠 때는 절차를 진행한 확인서를 고을 수령·관찰사·사헌부 등 세 곳에서 받아야 했다. 결국 천민이면 확인서를 풀어 주는 제도라기보다는 정권 유지에 위한 고발 상대에게 화유되거나 해를 입을 수도 있었다.

반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신문고를 칠 수 있는 특례 조항도 있었다. 역모나 중전(임금의 친족)을 해하는 일에 대해서는 바로 북을 칠 수 있었던 것. 고발에 따른 포상도 얼마 없었다. 천민은 벼슬을 받아 신분 상승을 이룰 수 있었으며 거기에 몰수한 범죄자의 재산까지 받을 수 있었다.

양반이나 양인의 경우에도 팔자를 고칠 관직과 재산이 내려졌다. 태종이 왕자의 난을 통해 권력을 잡은 정지척 이력 탓에, 정권 초기 반역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신문고를 이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광화문에 ‘국민 마이크’라는 민원 상담소를 열었다. 전시 행정의 아낀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 창구가 되길 바란다. /채희홍 사회2부장 chae@

<b>光 州 日 報</b>		<b>The Kwangju Ilbo</b>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程厚植</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b>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b>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